

VIP REPORT



■ 가계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가계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문제제기 1

2. 국내 가계신용의 악화 현황 및 원인 2

3. 시사점 10

■ HRI 경제 지표 14

1. 문제제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신용의 부실화에 따라 각종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실물경기로까지 전이되어 실업률과 소득감소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자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1분기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12월말에 비해 0.18%p나 상승한 0.73%까지 급등하였다.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9년 1분기에는 3.59%를 기록하였다. 한편, 높은 실업률과 소득악화로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9% 증가한 24,004명을 기록했으며, 상담건수도 93.3% 증가한 147,017건을 기록했다.

<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

	2007년 12월말	2008년 3월말	2008년 6월말	2008년 9월말	2008년 12월말	2009년 3월말
국내은행 가계대출연체율	0.55%	0.63%	0.52%	0.58%	0.60%	0.73%
신용카드 연체율	3.79%	3.52%	3.43%	3.28%	3.43%	3.59%

가계부실은 경제의 근간인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관리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신용 현황을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국내 가계신용의 악화 현황 및 원인

(악화 현황) 첫째, 2008년 말 현재 한국의 가계신용은 외환위기 당시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68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경상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도 외환위기 당시 43.0%,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 60.9%보다 각각 24.2%p, 6.3%p 급등한 67.2%를 기록하였다.

둘째,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한 상황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2%로 일본(65%)이나 프랑스(48%)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오히려 서브 프라임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미국이나 영국의 100%에 근접해있는 상황이다.

셋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규모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기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148%에 달했는데 비교대상국들 중 영국, 호주만이 159%를 기록했을 뿐, 미국, 일본, 프랑스는 각각 136%, 112%, 55%를 기록하여 한국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인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7년 말 46.2%에서 2008년 말 50.9%까지 확대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시에는 국내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에는 49.3%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50.9%로 증가한 것이 그것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증가는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도 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일반 예금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자율을 부과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을 가중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3% 미만의 낮은 개인저축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저축률마저 하락한다면 장기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악화 원인) 한국의 가계신용악화의 원인으로 첫째, 급격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04~2006년의 3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는 은행의 소매영업 경쟁 확산과 맞물리면서 가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약 3년간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산업대출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2007년 이후에도 예금취급기관들의 가계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둘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의 급락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가치도 함께 급락했다.(2008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8.9%, -14.9% 하락) 가계의 부채 규모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실업 증가 및 소득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 이후 3%를 유지하던 전체실업률은 200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

이면서 2009년 3월에는 4.0%를 기록, 가계 소득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증가율이 하락하여 추가적으로 가계소득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시사점

첫째,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계 부실 사태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실화는 금융기관들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를 통하여 부실화 및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자본금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 지원 등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가계의 구조조정은 부동산 매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거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가계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재현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가격의 급락과 이에 따른 거래 부진 상황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회복에도 노력해야 한다. 소득의 감소는 특히 서민계층의 금융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대출기관들의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신용보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민-관 합동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근본적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가계의 부채 부담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저조한 취업률과 기업들의 대대적인 감봉계획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앞으로 한동안 감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의 부채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세정책과 추경 예산을 확대 집행하고, 재취업 교육의 강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 문제제기

○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신용의 부실화에 따라 각종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회복지원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음

- (연체율 증가) 증가하는 실업률과 소득감소로 인해 가계신용이 부실화됨에 따라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 및 카드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도되고 있음
 - 2007년 말 0.55%를 기록했던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0.60%, 2009년 3월 말 기준 0.73%까지 급등하였음
 -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2008년 4분기 들어 상승세로 반전하였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 및 신용카드 연체율 >

	2007년 12월말	2008년 3월말	2008년 6월말	2008년 9월말	2008년 12월말	2009년 3월말
국내은행 가계대출연체율	0.55%	0.63%	0.52%	0.58%	0.60%	0.73%
신용카드 연체율	3.79%	3.52%	3.43%	3.28%	3.43%	3.59%

자료: 금융감독원.

- (개인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신청자 증가) 실업률 및 소득악화로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1/4분기 신용상담건수는 14만 7,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9% 증가하였음
 -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2004년 28만 7,35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3.9% 증가하였음
 - 특히 2008년 30~49세의 주력 경제활동 연령층의 신용회복 신청비율이 70.6%에 이르고 있음

< 신용회복 신청자 수 및 상담건수 추이 >

(단위 : 명, 건,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분기	1/4분기
신용회복 신청자 수	287,352 (359.4)	193,698 (-32.6)	85,826 (-55.7)	63,706 (-25.8)	79,144 (24.2)	15,500 (-13.8)	24,004 (54.9)
30~49세	205,762 (416.0)	131,315 (-36.2)	59,920 (-54.4)	45,150 (-24.6)	55,847 (23.7)	10,969 (-13.9)	16,210 (47.8)
상담건수	765,756 (246.1)	646,448 (-15.6)	305,037 (-52.8)	251,948 (-17.4)	446,573 (77.2)	75,819 (14.1)	147,017 (93.9)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문제제기) 가계 부실은 더 큰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관리 및 초기대응이 중요함

- 이에 가계신용을 점검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내 가계신용 악화 현황 및 원인

(1) 가계신용 악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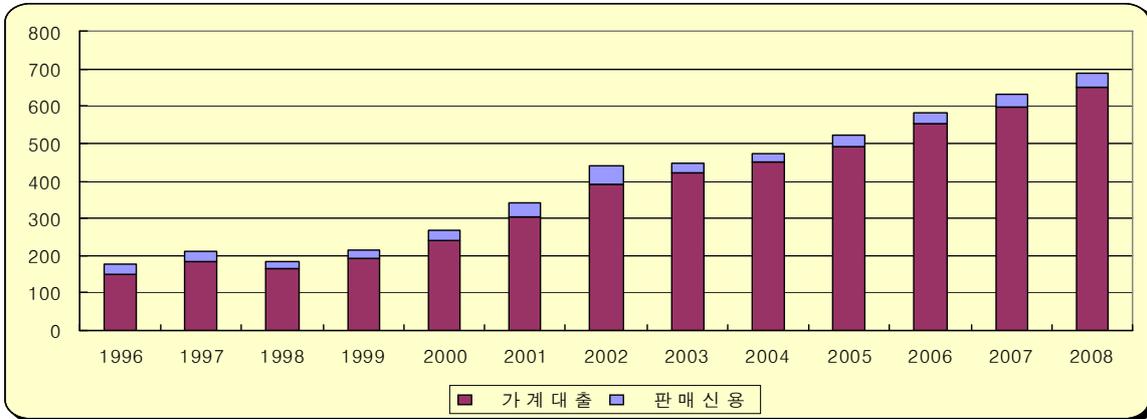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가계신용 규모는 주택대출을 비롯한 예금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 및 판매신용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가계신용 규모)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688조원으로 이는 외환위기 당시 대비 3배 이상의 수치임

-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1997년 한국의 가계신용은 211조원을 기록하였음
- 1996년 이후 가계신용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외환위기 및 카드대란 같은 경제위기 직전 가계신용이 급증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음

< 가계신용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ECOS.

- (GDP대비 가계신용 비교)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67.2%를 기록,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함
 -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과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 국내 GDP대비 가계신용 규모인 43.0%, 60.9%보다 각각 24.2%p, 6.3%p증가한 수치임
 - 특히, 2000년 이전까지는 45%를 넘지 못하던 동 비율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 계속 60%대에 머무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GDP대비 가계신용 규모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ECOS.

○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한 상황에 근접해 있음

- (GDP대비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2007년 말 기준 한국의 GDP대비 부채 규모는 서브프라임 이전의 미국이나 영국의 100%에 근접한 상황임
 - 국내 가계부채의 GDP대비 비중은 82%를 기록하였으며, 일본, 프랑스가 각각 65%, 48%를 기록한 점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GDP대비 가계부채의 국제비교(2007년 말 기준) >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GDP대비	82%	100%	100%	65%	48%	98%

자료: Lehman Brothers(‘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에서 재인용).

○ 또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도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됨

-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2007년 말 현재 국내 가계 금융부채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국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의 비중은 148%에 달해 159%를 기록한 영국, 호주보다 조금 낮을 뿐, 각각 136%, 112%, 55%를 기록한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국제비교(2007년 말 기준) >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개인가처분소득대비	148%	136%	159%	112%	55%	159%

자료: Lehman Brothers(‘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에서 재인용).

○ 한편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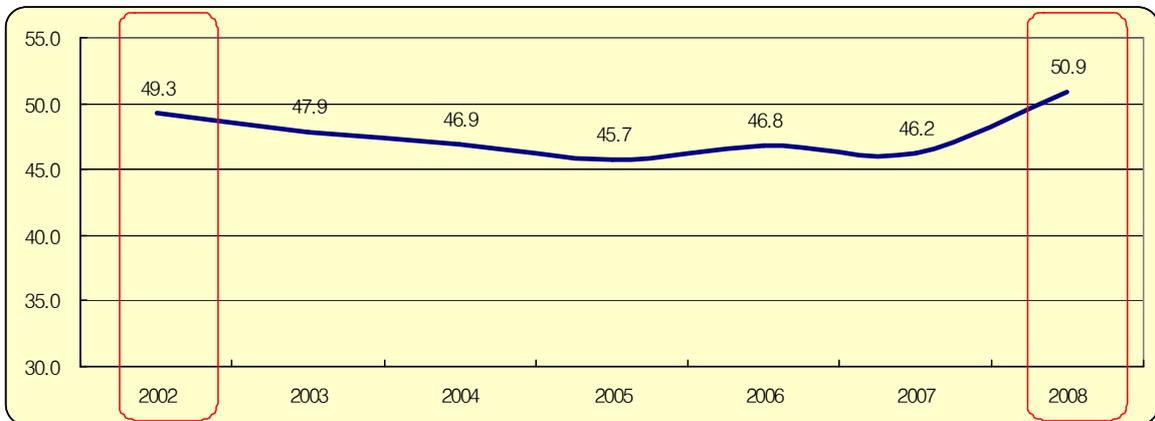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증가)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7년 46.2%에서 2008

년 말 50.9%까지 확대되었음

- 금융위기 시에는 국내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에는 49.3%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들어 다시 50.9%로 급등하였음
- 이는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 대출이자율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존재함

-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증가) 대출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非)예금은행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관 등의 비중이 증가세
 -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부채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들어 상승세로 반전
 -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기타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대출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부담을 가중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연도별 가계대출의 항목별 증가율 >

(단위 : %)

	가계대출	예금은행		상호저축 은행	신용협동 기관	보험기관
			주택담보 대출			
2005년	9.81	10.56	12.41	-6.24	12.64	6.49
2006년	11.54	13.32	14.13	-7.96	12.35	5.60
2007년	8.17	5.04	2.08	-11.60	15.90	9.89
2008년	8.89	6.84	8.14	2.07	16.38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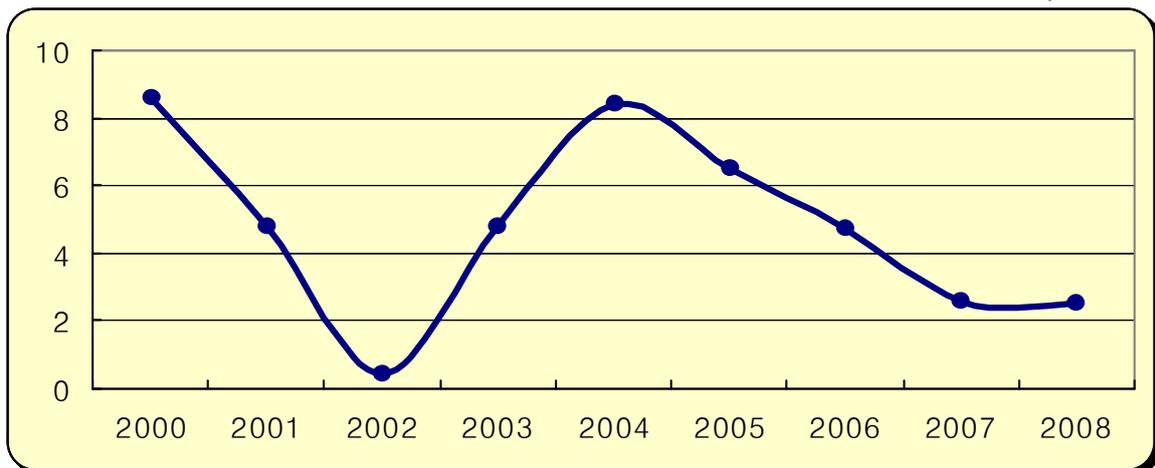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마지막으로, 개인순저축률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저축률 급락)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개인 저축률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존재함
 - 개인의 순저축률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계 자금유동성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여력이 악화됨

< 연도별 개인 저축률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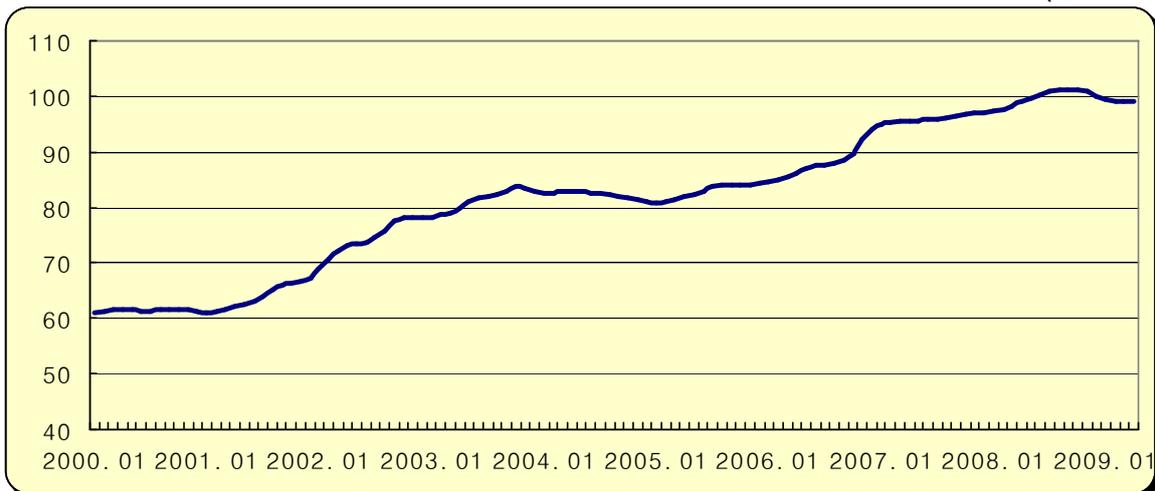
(2) 가계신용 악화 원인

○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연계된 대출금액이 증가해왔음

- 국내 부동산가격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가계자산 가치도 대폭 상승하여 가계대출 금액이 확대되었다고 추정됨
 -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의 대출금액 확대에 일조하였음

<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 (2008.12=100) >

(단위 : %)



자료: 국민은행.

- 더불어 은행소매영업 경쟁 확산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맞물려 가계 대출 급증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가계의 부동산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가계대출 확대에 일조한 바 있음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2000년 30% 초반에서 2002년 40% 중후반대까지 급등하였으며, 이처럼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2007년까지 지속되었음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

○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음

-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 지분 가치가 폭락, 개인 총 자산이 급감하였음
 - 개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은 2008년 3분기와 2008년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8.9%, -14.9% 감소하였음

< 개인 주식 및 출자 지분 추이 >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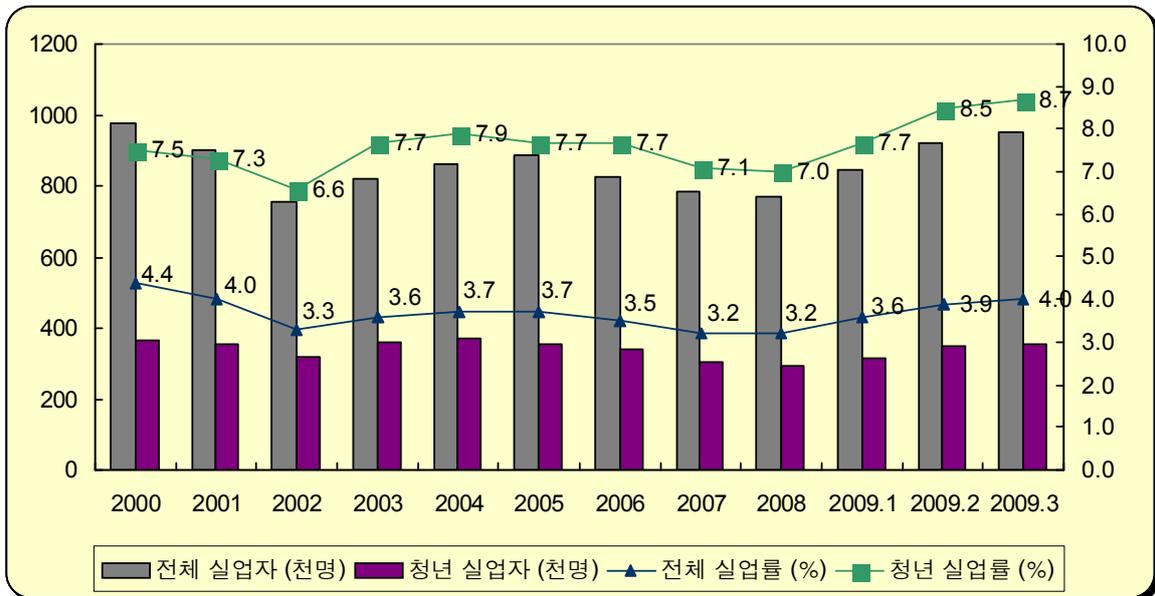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또한 실물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소득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가계 건성성에 악영향을 미침

- (실업률 증가 추이) 2002년 이후 3%대를 유지하던 전체 실업률은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2009년 3월에는 4.0%를 기록함에 따라 가계소득악화를 초래함
 - 특히, 20~29세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부터 급등하여 2009년 3월 현재 전체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8.7%를 기록함

< 전체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구직기간 4주 기준) 추이 >

(단위 : 천 명, %)



자료: 통계청.

주: 청년실업자는 20~29세의 구직자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감소) 실물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소득증가율마저 하락하여 가계소득 감소 요인을 제공하였음
 -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소득증가율이 2008년 들어 둔화되고 있음
 - 특히 2008년 2월 말 기준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비율은 34.1%로 이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치임

< 소득증가율 및 연도별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비율 추이 >

(단위 : 천 명, %)



자료: 한국은행, 노동부.

주: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비율은 각 연도별 2월 말 기준.

3. 시사점

○ 첫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실 사태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함

- 현재처럼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동반부실화를 초래

-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가 시급

-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를 통해 부실화 및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선순위 및 후순위 자본금 확충을 도

모해야 함

- 둘째, 세제 지원 등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가계의 구조조정은 부동산 매각에 크게 의존
 - 한편 현 상황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거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가계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부동산 시장 투기 재현은 방지하되 가격의 급락과 이에 따른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셋째,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가동해야 할 것임
 - 소득의 하락은 특히 저소득가계의 금융취약성을 악화시켜 개인신용 악화 및 대출기관들의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저소득층 가계 부실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지원책 및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및 금리를 저감시켜주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민-관 합동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넷째, 근본적으로는 가계 부문의 신용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자리 확충에 주력해야 함
 - 저조한 취업률과 기업들의 대대적인 감봉계획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앞으로도 한동안 감소지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가계의 부채구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하루 빨리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함
 -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세정책과 추경 예산을 확대 집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취업 교육의 강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전해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02-3669-4406)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